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상, 전북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자!

ISSUE
BRIEFING
2018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07.02 vol.172

www.jthink.kr

연구진
김재구 세만금물환경정책센터 연구위원
최성환 세만금물환경정책센터 연구원

jthink 전북연구원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07.02 vol.172

CONTENTS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전북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자!

I. 한반도 평화 기류와 북방경제협력	4
1. 한반도 평화 기류 확산	4
2. 북방경제협력의 기대	5
II.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란?	6
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목적	6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주요 내용	9
III.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전라북도 대응 방안	11
1. 새만금 활용한 남북 및 글로벌 경험 활성화	11
2. 아시아 스마트농생명 빨리와 연계한 농생명 분야 남북교류협력 선도	12
3. 남북교류기반시설 구축	13
4. 북한 지역과의 자매결연 추진	14
5.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역할 재정립	14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기동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전북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자!

- 문재인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 남북관계가 대화무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 상승
 -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기류 확산은 한반도 경제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 야기
 -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있어 남북이 화해무드를 이루고 평화협상 및 남북경협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대북 및 통일정책 분야에서 언급되었으며, 경제통일 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를 기초라는 개념에서 출발
 - 분단으로 제한된 경제영토를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은 물론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그랜드 플랜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국정과제 90) 제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세부사업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전력 인프라 확충 △도로·철도 연결 △경제개발구 계획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기류 확산 분위기 속에서 신북방정책 및 남북경제협력의 일환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에 대응 방안 제시
 - 공공주도로 매립 및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부지를 활용하여 남측에 위치하는 남북경협단지 조성과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핵심 거점 육성 등 남북 및 글로벌 경협 활성화
 - 남북간 농생명분야 생산, 기술 및 연구개발 협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스마트농생명 밸리와 연계하여 농생명 분야 남북교류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선도
 - 서해안 및 동해안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지자체간 공동대응, 연안항로 확대 및 농생명 특화항만 조성, 국제공항 적기 공급 등 남북교류 기반시설 확보
 - 전북 및 기초지자체와 북한지역과의 자매결연 확대를 통한 지역간 남북교류 활성화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추진
 -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역할 재정립 및 “(가칭)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지원

I. 한반도 평화 기류와 북방경제협력

1. 한반도 평화 기류 확산

- 남북경제교류는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지금까지 중단 상태 지속
 -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로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하였고,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교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5·27대북조치' 시행
 - 2016년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30여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경제교류는 사실상 중단
- 문재인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 남북관계가 대화무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 상승
 - 4·27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6·12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감 상승
 - 이후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실무진 회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대비해 지자체 및 기업들도 경협TF를 꾸리기 시작
-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기류 확산은 한반도 경제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 야기
 - 과거의 남북교류 확대와 중단 사례로부터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과 남북교류협력에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있도록 제도 마련 예상
 -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북방경제협력은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A) 4.26 남북정상회담



(B) 6.12 북미정상회담

(그림 1)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 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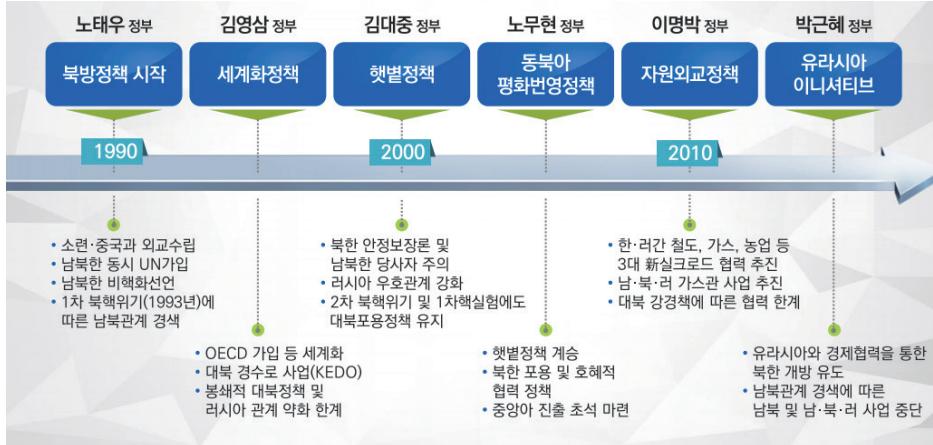
(그림 2)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5대 대북원칙)

2.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기대

- 역대정부의 북방정책에 대하여 정치외교, 경제협력, 남·북·러 협력, 추친체계 등에서의 다양한 평가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방향제시가 필요
 - 북방경제협력은 노태우 정부 이래로 거의 30여년간 추진되어온 사업¹⁾이며 문재인정부에서는 북방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설치

1) 이재현, 2018,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이슈브리프」, 3월호:1~17

2)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의 비전과 추진방향 중에서 인용



(그림 3) 역대정부의 북방정책²⁾



-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되어온 다양한 북방경제협력 정책과 더불어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와 안보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추가적 정책으로 해석
 - 신북방정책의 비전은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시대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교역·투자 활성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제시
 -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에서 북방경제협력사업은 거대시장, 풍부한 자원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북방 주변국과 역내 경제 통합 및 개방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경제·지리적 추진배경과 연계
- 신북방정책에 있어 남북이 화해무드를 이루고 평화협상 및 남북경협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빅 픽처’로 해석 가능

II.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란?

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목표와 전략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대북 및 통일정책 분야에서 언급되었으며, 경제통일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기초라는 개념에서 출발⁴⁾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목표 중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대북정책과 연관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는 다시 3개의 전략과 16개의 과제로 구성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두 번째 전략인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에 포함

3)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의 비전과 추진방향 중에서 인용

4) 임을출, 2017.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내용 및 평가”, 세종정책포럼: 서울:서마셋밸리스.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에는 신경제지도 구상과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등으로 구성
-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 남북한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활로를 개척하고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⁵⁾
 -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와 연결하여 경제 시장을 확장하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여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 목표
 -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의 경제 혜력 감소를 극복하고 경제 활로 개척과 남북의 경제통일 기반을 구축
 - 외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시장을 유라시아와 태평양 등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 달성
- 이와 더불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주변국과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전략과 연계⁶⁾
 -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동북아 지역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협력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 이를 위해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는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과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남방과 북방지역을 잇는 “번영의 축”으로 구분⁷⁾
 - 따라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를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연결하는 가교로써 활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 가능
- 통일부는 2017.7 정부부처 협의체, 국책 연구기관 협의체 등으로 구성된 신경제지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여 운영
 - 신경제지도 TF는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신경제지도 구상 과제별 추진계획 수립 및 연구,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대북 협상전략 수립 등 지원
 - 4·27 남북정상회담시 북측에 제공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내용 총괄

2015. 8.16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발표(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2017. 7. 06	베를린 구상(한반도 평화구상)
2017. 7.19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발표(한반도 신경제지도 포함)
2017. 7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태스크포스(TF) 설치
2017. 11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 용역 추진(통일연구원)
2018. 4. 27	남북정상회담(한반도 신경제지도 관련 내용 북측에 제공)

5) 이규창 외 9인, 2017.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p90.

6)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리

7) 이재현, 2017.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아세안을 통한 외교다변화”, “안보현안분석”, Vol.138호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주요 내용⁸⁾

■ 기본개념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분단으로 제한된 남한의 경제영토를 북한을 넘어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공동번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요약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시절인 2015년 ‘광복 7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제시한 집권비전
 - 즉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사실상의 섬 국가 상태에서 탈피하여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의 지정학적 성격을 복원하는 국가발전전략
-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국정과제 90)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에 제시
 - 분단으로 제한된 경제영토를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은 물론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그랜드 플랜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제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세부사업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전력 인프라 확충 △도로·철도 연결 △경제개발구 계획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비전이자 경제비전으로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3대 경제 및 평화벨트 구상

① 환동해 경제벨트(동해안권 에너지 자원벨트)

- 북한의 금강산, 원산(관광)·단천(자원), 청진·나선(산업단지, 물류인프라)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 금강산 관광재개와 설악산과 원산을 잇는 국제관광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단천 자원개발 협력과 납·북·러 3각 에너지협력 사업 등의 내용 포함
 - 나선·하산 복합물류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언급
 - 동해안 벨트는 극동 러시아 지방 천연가스를 남북한에 공급하는 가스관 건설사업, 단천의 자원개발(마그네사이트, 아연, 납 등), 경원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원산, 함흥, 청진 등 동해안 주요 항만의 현대화 및 산업지구 개발 그리고 지역에 공급할 전력개발 등 포함 예상

② 환황해 경제벨트(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제시
 - 경의선 개·보수 사업, 신경의선 고속도로 건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등 교통인프라 건설 사업이 포함

8)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이창규 외, 2017.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 또한 개성공단 재가동, 제2의 개성공단 건설, 서해 평화경제지대 조성,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 복합물류 네트워크와 중국의 도시들을 연결
- 서해안 벨트의 핵심 내용은 제조업 중심 경제특구·산업단지개발이며, 주요 대상지역은 개성, 평양, 남포, 신의주임. 따라서 서해안 벨트는 이들 주요 산업지구와 남한 수도권 및 중국 내오링성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인프라 건설 그리고 이들 지역 전체에 공급할 전력 개발 등을 긴밀하게 추진 필요

③ 접경지역 평화벨트(DMZ 환경·관광벨트)

-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및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것으로 제안
 - DMZ 환경·관광벨트는 경제개발보다는 평화와 환경에 초점. 공유하천 공동관리,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 생태 환경 보호 사업 제시

■ 한반도를 중심으로 시장 확대 및 하나의 시장 형성

- 남북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 주민 전체의 후생을 증진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내용으로 구성
 - 단기적으로 북한 내부의 시장화를 촉진하고 남북 경협을 통해 북한 전역 시장과의 연계성 강화
 - 중·장기적으로 소비재 및 생산요소 시장통합 지향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림 5)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추진과제

① 남북경협 재개

- 남북경협 재개는 국제적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이 크게 완화 또는 해제되어야 하는 전제가 필수라고 언급
 - UN의 대북제재 결의안으로는 2016년 11월 결의 2321호 제32항(대북한 무역에 대한 공적 및 사적 금융지원 금지), 2016년 3월 결의 2270호의 제32항, 제33항, 제35항과 결의 2321호의 제31항, 제33항(UN 회원국과 북한 간 금융 거래(인도적 및 외교 목적제외) 금지) 그리고 2017년 8월 결의 2371호 제9항~제11항(북한산 광산물, 기초금속 및 수산물 거래 전면 금지) 등이 해당
 - UN의 대북제재 결의안 완화 외에도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기존 경협기업의 관리, 시설점검 및 관리, 시설 복구 대책 수립과 지원제도도 반드시 필요

② 남북한 하나의 시장형성

- 남북한 하나의 시장형성 과제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경제협력협정과 같은 법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
 - 주요내용은 남북교역에 대해 무관세적용, 육로를 포함한 운송, 통행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 남북 간 직접 금융거래 채널 확보, 기업인의 상호 방문과 체류 및 경협 관련 남북 간 통신 자유화, 대북 투자기업의 경영권, 재산권을 제도적, 정치적 보증 필요
 - 남북교역 및 통행을 물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남북 간 교통 인프라 확충
 - 장기적으로 시장 통합이 진전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과 기술교류, 설비지원 등을 통해 북한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

③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 정책은 현재까지 나온 남북경협 제안을 포괄하는 종합적 패키지이며, 이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은 서해안 벨트 사업으로 전망
 - 서해안 벨트가 중요한 이유는 남북한의 수도권을 포함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며, 중국 랴오닝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제시

④ 남북접경지역 발전

- 남북접경지역 발전 과제는 남북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하고 남북 공동으로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서해안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 등

〈표 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3대 벨트의 주요 예상 프로젝트

3대 벨트	부문	주요 예상 프로젝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산업	개성공단 확대 개발 평양, 남포, 신의주 경제특구·산업단지 개발
	교통·물류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남·북·중 육상운송로 연결 남포항, 해주항 현대화
	전력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및 송배전망 현대화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에너지	남·북·러 가스관 건설 수력발전소 현대화 및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자원	단천 자원 특구 개발
	교통·물류	경원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원산, 흥남, 청진, 나진·선봉 등 주요 항만 현대화 남·북·중·러 육상운송로 연결
	산업	원산, 금강산, 칠보산 등 동해안 관광지구 개발 원산, 함흥, 청진, 나진·선봉 등 주요 도시 경제특구·산업단지 개발
DMZ 환경· 관광벨트	환경	공유하천 공동관리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관광	세계생태평화공원 및 문화교류센터

자료:이창규 외, 2017.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p96

III.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전라북도 대응 방안

1. 새만금 활용한 남북 및 글로벌 경협 활성화

- 새만금은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상호번영과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간 산업간 협력의 거점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남북경협단지 등 남북경협에 중요한 역할 수행 가능
 - 새만금에는 한중FTA를 통해 국내 유일한 한중산업협력단지가 추진되고 있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 보유
 - 북측의 개성공단과 대비되는 남측의 남북경협단지로 새만금 부지를 활용하여 북측 인력공급, 남측 부지제공 및 자본참여 등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추진 가능
- 새만금에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있어서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재생에너지 3020정책」이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키우겠다는 정부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누적설비용량을 13.3GW(2016년 기준)에서 63.8GW로 증가시키기 위해 신규 설비 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한 계획

-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2018년 하반기 설립 예정인 새만금개발공사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함께 관련 산업의 집적 추진 예정
- 북방경제협력 중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통해 에너지 관련 동북아 국가간의 협력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새만금이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 가능



*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의 비전과 추진방향 종에서 인용

(그림 5) 북방경제협력 구상도

2.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와 연계한 농생명 분야 남북교류협력 선도

- 전북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와 연계하여 스마트팜, 정밀농업,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선도
 - 전북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구축을 위한 식품, 종자, ICT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등 5개 클러스터 육성과 4차산업 플랫폼 구축 추진
 -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미래형 신산업 육성, 융합형 인재양성, R&D 분야의 규제개선, 산업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양성 도모
 - 따라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중심으로 1차 산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농생명산업의 고부가치화 선도 가능
- 동북아 식량문제 해결 및 남북경제협력을 도모하고자 단계적으로 농생명 분야 지원사업 추진
 - 전북은 농생명분야 남북교류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 지원, 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낙농업기반 복합단지 조성, 방역약품, 및 수의방역기술 지원, 축산물 가공 유통기지 구축 등 제안

- 단순히 식량을 지원하는 경제협력이 아니라 남북 공동의 연구협력을 통해 지속성 확보 및 시너지 창출을 통한 한반도 번영에 기여 방안 모색

3. 남북교류 기반시설 구축

-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전북은 서해안선 연결과 함께 동서축, 강호축을 통해 동해안과 연결 추진 필요
 - 중국·러시아를 통해 유라시아 철도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목포와 새만금, 인천, 신의주 등 경의선과 서해안선을 연결하는 남북철도가 핵심적인 철도망구축 사업
 - 전북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한반도의 동서축 및 강호축상에서 서해안과 동해안과의 철도 연결을 통해 극동러시아 지역과의 자원 교류 확대 도모 필요
 - 전북은 남북교류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타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



(A) 철도와 해양 운송 비교

(B) 남북 간선 도로 철도망 구상

(그림 6) 남북교류기반시설로의 철도망

- 향후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한반도 단일 시장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차원에서 항만과 공항은 필수적인 기반시설
 - 전북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과 함께 조성중인 새만금신항만의 물동량 확보와 항만 및 배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위하여 북한지역을 포함한 연안항로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농생명산업 등 항만 특화운영 방안 모색 필요
 - 동북아경제공동체를 통한 시장의 확대는 항공수요의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실현 등 장기적 측면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의 예측 수요 조정과 적기 공급 필요

4. 북한 지역과의 자매결연 추진

- 전북(또는 기초지자체)과 북한내 지역과의 자매결연으로 지역차원에서의 남북교류 활성화 및 지역 네트워크 강화 추진
 -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다른 행정구역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자매결연으로 양 지역 주민 상호 간의 우의를 증진시키고 문화, 관광, 체육, 경제, 산업 등 지역 간 정보 교류 및 협력을 도모
 - 도시 간에 이루어지는 자매교류는 시민들의 타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고, 선진 행정 기법의 도입을 촉진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반으로 작용
- 전북이 가지고 있는 농생명 자원과 다양한 문화자원의 교류와 함께 태권도 등 체육 교류 활성화를 통해 그 동안 남북분단으로 인해 심화된 거리감 해소 가능
 - 전북은 북한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과 함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 지역과의 경제, 문화 및 체육교류에 대한 적극적 추진 필요



* 자료: 위키백과

(그림 7) 북한 행정구역 현황

5.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역할 재정립

- 전라북도는 2007년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 설치 및 위원회 운영중
 - 조례는 전라북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이 목적

- 향후 4.26 판문점 선언 등의 이행을 위한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을 다양한 측면에서 재정립 필요
- 이와 함께 지역차원에서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종합적 발전 프로그램 마련 등을 위하여 구체화된 계획 수립 필요
 -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있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기능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이 명시
 - 이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원칙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칭)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단계적이고 실천적인 방안 제시 필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효자동3가 1052-1)

대표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